

어음부도율 전국 1위... 광주 경제 심상찮다

1% 육박... 전국 평균의 7.5배
대출금 연체율도 전국 최고
국회 기재위 국감 자료

광주지역 어음부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호남지역 어음부도율이 전국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부터 짚어주어야 호남지역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6일 한

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어음부도율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에서는 광주, 도에서는 전북의 부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부도율은 전국 평균이 0.13%로 대체로 안정된 상태다. 서울의 경우 0.1%로 전국 평균 보다 낮아 안정적인 기업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지역 부도율은 0.99%로 1%에 육박했다. 전북도 0.53%로 전국 평균의 4배를 웃돌았다.

이같은 부도율은 지역 총생산과도 연계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광주 지역 총생산은 37조 7000억원, 전북은 49조 3000억원으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구수가 비슷한 대전과 충남의 경우 각각 40조 5000억원, 115조 5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 부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기업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성엽 의원은 "지역 어음부도율은 곧 그 지역 기업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광주와 전북의 기업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광주와 전북의 지역 총생산 역시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역은 대출금 연체율도 전국

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최고를 기록해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을 반영했다.

지난 6일 국회 정부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시중은행(신한·우리·SC제일·하나·씨티·국민) 대출금 연체율은 광주가 0.4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연체율은 전국 평균 0.31%를 훨씬 웃돌았고 서울(0.38%), 부산(0.36%) 보다도 높았다. 전남 연체율은 0.16%를 기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특수부 폐지 이달부터 추진”

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 별건수사 제한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정사진’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3면)

조 장관은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개편이 이뤄지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수용한 결과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

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달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특수부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주요 특수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사 파견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외부 위원도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어떤 수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연합뉴스

광주지법·고법·광주지검·고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전두환 재판 ‘느림보 진행’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고검에서 열렸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의 전두환(88)씨에 대한 ‘느림보 재판’이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전씨를 기소한 광주지검검찰청의 수사력은 이례적으로 극찬을 받았다. 또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광주 시 고위공직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도 쟁점이 됐다.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과 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법·고법, 광주지검·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 등은 광주지법의 전씨에 대한 재판 지연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광주지법이 전두환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신속하게 심리해 5·18 진상규명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18에 대해 아직도 영화관에선 ‘택시 운전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나와서는 북한군 폭도 700명이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한국당에선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5·18 진상규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지법의 전씨에 대한 판결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 등이 국감에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미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목격 증언과 각종 기록·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는 데도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광주지법 재판부가 전씨를 지나

치게 예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선 전씨 변호인측이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재판시간 끌기’에 나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1심 선고조차 올 해를 넘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반면 이날 오후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선 이례적으로 전씨를 기소한 광주지검의 수사력을 극찬하고 “조속히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전씨를 기소한 검사가 현재 공판부장으로 직

접 재판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주문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대형 로펌 등 권력을 가진 집단과 법원 내부 고위직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관 예우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A·B·C 방식으로 표기하는 법원의 비실명 판결문 공개 방식을 거론하며 “개인정보가 아닌 부분까지 비실명화하는데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은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은 재판부가 가장 의식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내 농어촌지역 인구가 줄어 고령화·공동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국가적 종합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8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전남지역 출산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아 국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돼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희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농어촌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라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북 등 다른 시·도와 연합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구균형정책을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으로 건의해나가기”고 제안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았다. 2018년 6월 당시 인구 188만 8,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41만 1000명인데 반해 20~39세 여성 인구는 19만3000명에 불과했다. 22개 시·군 가운데 무안군, 나주시,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등 6곳을 제외한 16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아 타이거즈 첫 외국인 감독 오나 ▶2면

소매치기 범죄 전통시장서 ‘활개’ ▶6면

한국영화 100년 - 새로운 물결 ▶18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리스토퍼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키오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리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